

# 민실위 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김연국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전화: 789-3883~6 팩스: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www.mbcunion.or.kr](http://www.mbcunion.or.kr)

2018년 1월 4일(목)

## 타성과 관행이 낳은 사고

### 우리는 파업을 통해 과거와 제대로 단절했는가?

<뉴스데스크>라는 타이틀을 다시 걸고 메인 뉴스를 방송한지 9일이 지났다. 그 첫날이었던 12월 26일 <뉴스데스크>는 기존 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반성은 다시는 권력에 굴종하는 언론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 불과 며칠 사이 뉴스 제작의 기본과 기초를 망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민실위 보고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자 한다.

#### 1. "여론왜곡 우려, 취재윤리 위반"... 과연 그게 전부일까

##### ① 개헌 어디까지 왔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87944\\_22663.html?menuid=nwdesk](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87944_22663.html?menuid=nwdesk)



새해 첫날, 올해 정치의 화두인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상황을 알아보는 리포트가 나왔다. 이 기사의 첫머리에 바로 문제가 된 인터뷰가 등장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헌법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4살, 학생)

이 인터뷰는 지난주까지 MBC의 뉴미디어뉴스인 <엠빅뉴스>에서 인턴 기자로 일하던 대학생이었다. 리포트를 한 남형석 기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방송 직전까지 MBC의 구성원이었던 지인을, 일반 대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게 인터뷰로 등장시킨 것이다. 기사 중반에는 노동자의 권한이 개헌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한 회사원이 등장한다. 이 회사원 역시 기자의 지인이었다.

비슷한 일이 3주 전에도 있었다.

##### ② 전자담배세도 인상 금연 예산은 제자리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73071\\_21408.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73071_21408.html)



12월 9일 방송된 염규현 기자의 이 기사에서는 궤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면 전자담배를 사서 피울 만한 장점이 없다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인터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사용자 역시 MBC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개헌 관련 기사가 방송된 다음날인 1월 2일 뉴스데스크는 사과했다.

"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섭외해 일반 시민 인터뷰로 방송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도 행태일 뿐 아니라,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렇다. 여론 왜곡 우려가 있는 보도행태이고, 취재윤리 위반이다. 그러나 이 사과는 내부자인 MBC 기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표피만을 짚었을 뿐이다. MBC 뉴스

의 위기,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 2. 시민 인터뷰, 이대로 좋은가?

개헌 관련 리포트의 앵커멘트는 이렇다.

"올해 화두가 될 개헌 문제, 정치권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그것을 알아 보기에 앞서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생각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정기부는 "공영방송 정치 뉴스에 발언권을 갖는 사람을 정치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들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민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도에는 절실하게 동감한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추출해 뉴스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적 정확한 방법은 여론조사이다. 과학적인 규칙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질문을 던져 얻은 응답을 통계학을 빌어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역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여론조사, 특히 한국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이 과연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해 수많은 논란이 있다. 집 전화를 위주로 하는 표본 선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생각의 지형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와 선거보도에서는 그 역할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나마 과학적이라는 여론조사조차 이런 한계가 분명한데, 과연 시민 인터뷰는 어떨까? 우리는 시민 몇 사람의 인터뷰로 여론을 들어봤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시민 인터뷰는 뉴스에 유권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특정한 이슈에 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그 이슈의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직접 선택하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편의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식이다. 만약 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담는 것이 목표라면 연령, 지역, 직업군, 젠더 등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대표성을 갖도록 인터뷰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 쓰인 인터뷰의 문제점은 단순히 기자의 지인을 등장시켰다는 데에 있지 않다.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했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헌법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 인터뷰는 개헌, 특히 정치 체제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훨씬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과연 대통령제의 폐해인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단순히 정치 체제의 문제로 제한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다른 문제들은 없는가? 기자의 인터뷰는 이런 질문에 응답 가능한 여러 의견 중 하나만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모자 씌우기'처럼 가볍게 넘어가는 인터뷰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기자 개인의 안일한 판단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민실위원들은 리포트의 구색을 위해 반사적이고 습관적으로 방송용 인터뷰를 하는 관행이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방송용 인터뷰는 리포트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구성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앞뒤가 뒤바뀌어 인터뷰를 리포트의 형식적 완결성을 위한 의무적인 양념처럼 생각하는 관성이 자리 잡았다.

MBC의 보도프로그램 준칙은 "어떤 사회현상이나 갈등 문제 등을 다룰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경우 가급적 다양한 사회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소개한다.는 다양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인터뷰를 할 경

우, 특정 의견을 일반화된 여론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리포트를 매끄럽게 전개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고민 없이 사용하는 인터뷰는 언제든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는 남형석 기자나 기사를 감수한 박준우 정치부장 개인이 아니라 MBC 기자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 3.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 왜 취재하지 않았나?

12월 26일에는 또 다른 관행이 문제를 일으켰다. 바로 그림 위주의 기사 전개 습관이다.

③ 긴박했던 대피 초기 우왕좌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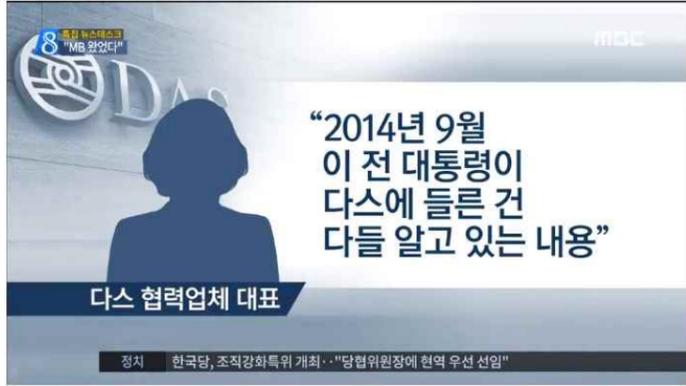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794\\_21408.html?menuid=nwdesk](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794_21408.html?menuid=nwdesk)

제천 화재 당시 상황이 담긴 새로운 CCTV를 확보해 제작한 이 기사의 특징은 대부분 그림 묘사로 이뤄져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습니다.”와 “4시 31분쯤부터는 한 소방대원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 세 문장이다. 편집부에서 제목으로 내보낸 ‘우왕좌왕’이라는 표현과 본문 속 묘사들이 합쳐지면서 이 리포트는 현장 119 대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곧바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과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관의 역할을 무시한 기사라는 퇴직소방공무원 단체 ‘119 소방안전 복지사업단’의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CCTV는 한 신문사가 당일 오후 4시 50분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 국부는 MBC충북의 협조를 구해 오후 5시가 넘어서 그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찬정 데스크가 기사를 작성하는 동시에 리포트를 위해 외근 중이던 최유찬 기자가 회사로 들어와 8시 뉴스 시간에 맞춰 급하게 리포트가 준비됐다. 시간에 쫓겨 리포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했다. 화면에 등장한 119 대원이 왜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않는지, 교신만 하면서 걸어다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취재가 없었다.

최근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스데스크> 재개 첫날인 12월 26일에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조용히 다스 미국법인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보도가 방송됐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뒷받침하는 다스 미국법인 하청업체 관계자의 인터뷰도 들어갔다. 조국현 기자는 미국 현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보도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실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이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수집됐다면, 정말 다스를 방문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취재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와야 했다. 논박을 하거나 해명에 대한 반대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MBC의 시사 보도프로그램 제작 준칙은 “고발이나 비판적 보도의 경우 그 대상의 반론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기사에서 반론권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26일 취재를 한 담당기자는 물론, 데스크 과정에 참여한 데스크와 부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취재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 행적 파악에 집중한 나머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뼈아픈 부분이다.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의가 있었고, 28일에는 언론중재위에도 제소됐다. 12월 26일은 <뉴스데스크>가 다시 시작하는 첫 날이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마무리할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MBC, 새로운 뉴스를 건설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어지러운 혼란기는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극복해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다. 우리가 채 호흡을 고르지 못하고 달렸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의욕이 넘쳤지만, 조급했고 준비가 부족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 우리는 타성과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가?

-재건과 혁신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위 사건들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문제가 모두 외부에서 지적됐다는 점이다. 기사를 담당 한 일선 기자부터 간부와 보도 책임자까지 ‘이 기사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미쳐 품지 못하고 있었다. 이 치부는 우리의 내부의 점검 절차나 문제의식이 아니라 시청자와 기사 당사자, 즉 외부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파업이 끝나고 취재와 제작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묵인해온 취재와 제작 방식, 그리고 하루하루 8시에 나가는 리포트에만 집중하는 ‘납품’ 현실이 저널리즘의 기본을 잠식하고 있다. 여전히!

지난 7년 방송장악은 바로 이 그릇된 관행의 틈을 파고들면서 시작됐고, 가능했다. “우리의 제작 방식이 원래 이랬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식의 타협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저항의 포기, 저항의 유예로 이어졌다.

언젠가 맞을 때를 지금 맞게 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어떤 관행과 단절해야 하는지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운 채 성급히 나선 것은 아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처절하게 싸웠는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 저널리스트로서 준비돼있는가?”

민실위는 새로 시작한 <뉴스데스크>에서 위에 나온 사례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노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실위 보고서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뉴미디어국장, 스포츠 국장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재철 체제에서 일방 파기한 기존 단협에 따르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장이 국 운영에 관한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부문 구성원들의 질의, 제안,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노동조합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는 결국 보도 닷새만인 31일 사과했다.

“저희 MBC는 현장 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취재하지 않은 채 CCTV 영상만으로 구성된 이 같은 보도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취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왜 우리는 취재하지 않았는가”이다.

민실위원들은 해당 리포트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 그림을 확보하면 기사가 된다’는 보도국에 자리잡아버린 낡은 타성과 속보 관행이 만들어낸 사고라고 지적했다. 언제부터인가 특히 사건사고 기사에 있어서 CCTV와 블랙박스 만능주의가 자리잡았다. 현장 상황을 담은 CCTV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주요 방송사들이 사건사고를 다루며 모두 똑같은 화면을 내보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상은 물론 방송 뉴스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기사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영상은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기사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배경과 스토리가 필요하다. 탄탄한 취재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림’은, 그 자체로 의미 없는 정보일 뿐이다. 기자의 역할은 그 정보 더미 속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림 좋아?” MBC 기자들이라면 매우 익숙하고 귀가 따갑게 들었을 질문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한 이 질문이 오랫동안 뉴스를 갈아먹어왔다. 이제는 이 질문에 질문을 던질 때이다. “그림 좋아?”라는 질문은 과연 정당하나?

### 4. 반론 없는 기사 - 우리는 지금 조급하다.

④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800\\_21408.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800_21408.html)